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 한 태 의원)

의안 번호	451
----------	-----

발의연월일: 2023. 6. 1.

발 의 자: 김한태·이규근·이주한·
이동운 의원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계획 수립 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8조)
- 나.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에 따라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
- 다.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 사항과 인용 조문, 띄어쓰기 등을 관련 기준에 맞도록 정비(안 제1조 외)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6조의2,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58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보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현재의 세대가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과 목적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환경보전시책의 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예방 및 사전배려의 원칙
3. 오염원인자 책임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및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필요한 연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민 또는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구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이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환경보전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은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7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보전 계획
 -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환경
 - 나. 대기·수질·토양 및 기후 등 생활·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환경교육·홍보 등)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조사) ① 구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질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단체, 구민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구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계획 실천 방안의 수립·추진 및 평가
3. 환경계획에 관한 교육·홍보
4.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책 연구 및 개발
5. 그 밖에 환경계획, 환경조사 등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계획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환경계획에 대해서는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군의 환경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한 상호 협력
2.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3. 환경 정보·기술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 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도 환경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군·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환경

나. 대기·수질·토양 및 기후 등 생활·기후환경

2. 시·군·구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